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 '공영화 전환'...수정 계약안 마련

협상단 7차례 사측 협의...노선권 감정평가 적법성 등 확인 시의회 임시회 제출·계약체결·지방채 발행 등 단계적 추진

목포시가 시내버스 인수인계를 위한 협상단을 꾸려 회사 측과 7차 협의 끝에 수정 계약안을 마련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인수인계 동의안 심사 부결에 따라 지난 2월8일 추가협상단을 재구성, 시의회·시민과

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측과 추가 협의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시의회는 당시 노선권 인수 감정평가 금액 210억원이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부결했다. 협상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중

심으로 계약서 각 조항별 세부 사항 검증과 노선권 감정평가 관련 규정 적법성 검토, 감정평가사의 면담을 통해 감정평가 금액 적정성 등을 확인하며 사측과 협의를 추진했다. 기존 계약안의 세부 사항 검증 내용은 운영 인프라 제공, 비상경영 연장 등 목표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협상단은 노선권 감정평가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절차 이행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와 대면

질의·응답을 진행해 평가 방법과 평가 금액이 적정했음을 확인했다. 평가금액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산출 평균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지 않고 노선권 매입액을 조정하면 배임·사해행위 등 법적 분쟁 우려가 제기됐다. 또 협상단은 시내버스 운영 인프라에 대해 기부채납 등을 제안했지만, 사측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난 속에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 인프라 자산은 가수금 등

의 이차 충당을 위한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협상단은 사측 대표이사가 그동안 밝혀왔던 사회 환원의 규모를 구체화하고, 수정 계약안에 반영하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이러한 협상 전반에 대해 시의회 보고(9회), 시민단체 면담·간담회(5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공유했다. 협상단 공동단장 김순호 변호사는 "각 고의 노력 끝에 시내버스 공영화 전환의 기틀이 되는 수정 계약안이 도출됐다"며

"앞으로 시민의 필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해 시의회, 시민단체, 목포시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추가협상단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을 3월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계약 동의안이 심사의결되면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제출, 공영제·준공영제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우리동네 주민자치회는 영암군의 민선 8기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11개 읍면 마을 경로당을 공중보건과의 보건의료인 등이 순회하며 맞춤형 건강 검진을 진행한다. (영암군 제공)

영암 군민자치회, 의료사각지대 없앤다

매주 수요일 11개 읍면 경로당 순회 맞춤형 건강검진

영암군이 '우리동네 주민자치회' 제도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영암군은 최근 "우승희 군수가 군서면 죽정마을경로당 '우리동네 주민자치회' 현장을 방문해 의료 공백 최소화

상황을 살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동네 주민자치회는 영암군의 민선 8기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 11개 읍면 마을 경로당을 공중보건과의 보건의료인 등이 순회하며 맞춤형 건강

검진을 진행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어르신 인구 비율이 29.2%인 초고령사회로 분류되면서 어르신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자치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민자치회와 보건소 직원들은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바탕으로 건강상담, 만성질환 관리, 국가건강검진, 심뇌혈관 예방 교육, 치매 조기검진 등을 안

내하고 있다. 또한 지역 병·의원을 연계하고 만성질환 관리, 한방 침 놓기, 틀니 관리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군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3개월간 4천200명 어르신을 살폈다. 우승희 군수는 "한 명의 어르신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제도의 폭과 깊이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강필구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촉구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서 논의

강필구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영광군의회 의장·사진)이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 독립을 촉구했다. 17일 전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담양리조트에서 제29회 전남의장협의회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22년 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지방의회는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반쪽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필구 협의회장은 "정부가 인구 10만 미만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지방의회



의 사무기구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지방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방의회 직급 상향과 조직 구성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강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해남 마을방범 강화, CCTV관제센터 '속도'

올해 77개마을 253대 설치...2026년 통합관제 완료 예정

해남군이 마을방범을 강화하기 위한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관내 전체 515개 마을의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광케이블 전용망을 마을 단위로 구축해 통합관제를 목표로 군-마을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 사업을 통해 마을방범 CCTV를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 24시간 CCTV 상황 관제를 실시,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방범을 강화, 운영하게 된다. 지난 2022년 처음으로 44개 마을에 15

1대의 CCTV를 설치하고 통합관제를 시작, 지난해에는 88개 마을에 436대의 CCTV 설치와 통합관제를 확대했다. 올해는 77개 마을에 253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전체 마을에 대한 통합관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최근 사업 설명회를 관내 7개 마을에서 실시했다. 마을방범 CCTV의 관제 일원화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전남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선 도적 모범사례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추진 '청신호'

尹대통령 민생토론회서 "속도 높여 추진할 것" 언급

완도군의 숙원사업인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추진의지 표명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표명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2014년 타당성 재조사 후 광주-백진동-강진성전 구간을 1단계, 강진-성전-해남 남창 구간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1단계인 광주-강진 구간은 총연장 51.11km, 총사업비 1조7천811억원을 투자해 2017년 8월 착공,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2단계 구간은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총연장 38.9km, 총사업비는 1조5천955억원이며, 2023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로 선정돼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완도군에서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1단계 구간은 2017년도에 착공, 2단계 구간은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확정되고,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됐다. 신우철 군수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전국 단일 생활권 형성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강진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문체부 3년간 최대 4억5천만원·홍보마케팅 지원

강진문화관광재단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공모에 선정돼 위상을 높였다. 17일 강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역 주민과 정부(지자체 등)의 중간 단위 조직으로 기초지역 단위에서 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1·2단계 각각 43대1, 23대1로 치열한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두 차례 문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규 10개 지역은

전남 강진·신안군, 광주시 동구, 전북 김제시, 충북 영동군, 강원 동해시, 영월·횡성군, 경북 영덕·청도군이다. 강진문화관광재단은 국비 1억5천만원을 포함해 최대 3년간 4억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도 동시 지원 받는다. 재단은 이달 중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서울-경기 지역민을 대상으로 강진과 장기 관계 형성형 프로그램 진행하는 생활 인구 양성사업



강진문화관광재단의 대표 관광콘텐츠사업인 '조만간 프로젝트' 출연진과 관광객들.

으로 '유홍준 교수와 함께 하는 강진 관광 명예홍보사원 인턴십' 등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 인지도 향상을 위한 '반갑네, 강진'과 관내 주요 관광 사업체 수용태세 개선·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한 '강진 관광사업체 폭력 체인지'가 진행될 예정이

다. 임석 강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문체부-한국관광공사에서 검증 받은 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 추진으로 관내 지역민들이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국립목포대 "尹대통령 전남의대 신설 추진 환영"

국립목포대학교는 17일 "지난 14일 전남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이번에 의대 증원 신청조차 하지 못해 전남 도민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표명에 대해 감사와 환영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총장은 "전남의 섬, 농어촌과

산업단지에서 고단한 삶을 일궈온 180만 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대학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남도에 국립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의 의료체계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국립 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건의에 대해 "전남도에서 대학을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안=김상호 기자